

● 제27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1. 2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종욱 의원 외 78명 발의 】

의안번호 1538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종욱 의원 외 78명
- 나. 제안일 : 2016. 11. 22.
- 다. 회부일 : 2016. 11.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권력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외교·행정·안보 등 국정 모든 분야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제1조의 기본정신에 위배됨.
- 나.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시민의 준엄한 판단을 받게 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대한민국 헌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과 그 주변인(이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 의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의 최순실 등과의 비리 연루 의혹,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하여,
- 검찰의 중간수사(2016.11.20.) 결과 이들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청와대, 국회, 여·야 등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에 대한 검토

- 최순실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행정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국정관리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과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하고 재단을 사유화하는 등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 등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검찰은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최순실 등을 비롯한 안종범과 정호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각각 구속기소 했음.

- 검찰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음.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하였음.
- 한편,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2016.11.17.)해 현재 국정조사를 준비 중에 있음.
- 또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2016.11.23.)되어 특별검사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임.
- 이에 본 결의안은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안종범·정호성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존중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러한 국정혼란 상황에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고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려는 것임.
- 다만,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조만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과 대통령의 책임유무를 명확히 가린 후에 퇴진을 촉구하자는 견해도 있음.